

Ⅲ. 주요 경제 현안

1. 실업 사태와 정책 과제

- (실업 동향) 3월 현재 실업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임
- (실업 전망) 실업자는 연평균 130만 명에 달할 것이며, 4-5월 경에는 150만 명에 이르는 실업대란이 예견됨. 더구나 100만 명 이상의 고실업이 향후 3-4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
- (바람직한 정책 방향)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

○ (실업 동향) 최근 실업자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
- IMF체제 이후 실업자가 하루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음
 - 지난 1월 실업률이 12월 대비 1.4%p 상승한 4.5%(실업자 93만 명)로 급등함
 - 3월 현재 실업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임
 - 1일 평균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97년 11월의 196건에서 98년 3월중에는 1,622건으로 급증함

○ (실업 전망)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자가 연평균 130만 명에 달한 전망임

- '98년 실업률은 97년의 2.6%를 훨씬 상회하는 6.0%에 달할 것으로 보임
- 4-5월 경에는 실업자가 150만 명에 이르는 실업대란이 예견됨
- 특히 100만 명 이상의 고실업이 향후 3-4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
- 80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실업 사태가 3-4년 지속된 경험이 있음
- 실업자의 85% 정도는 휴·폐업이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轉職실업자일 것으로 추정됨
- 97년의 경우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60% 정도였음
- 실업자의 76%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임
- 실업 문제가 노동부 전망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
- 모건(Morgan)社は 올해 실업자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

○ (실업 대책) 정부는 실업 사태의 완화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

-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이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안정망의 구축 및 직업훈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
 -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임
- 현재 나와 있는 정책에 더하여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확대할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
- 고금리로 인한 민간투자의 부진과 재정투자의 한계 때문에 공기업의 공공투자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음

-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(Social Safety Net)을 구축하고자 함
- 실업부조 형태의 단순한 생계지원보다는 공공근로사업 등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 방법이 중심이 될 것임
- 3월 24일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올해 공무원 봉급의 10-20%를 삭감,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대책 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함

<확정된 정부의 실업 대책>

	계원	수혜인원	구체적 내용
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	4,500억	54.8만 명	-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인건비 부담액 일부 지원 등
직업안정망 확충	510억		- 고용센터 신설(22개소) 및 인력은행 증설(20개소) - 민간 전문상담원(276 명) 증원 및 One - Stop Service 제공
직업훈련 확대	6,250억	26.5만 명	- 민간 및 공공직업훈련기관 확충 - 대학에 직업훈련을 위한 특별 과정 설치
실업기간중의 생계보호	2조8천억	74.0만 명	- 실업급여 2개월 연장(최장 7개월→9개월) -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 등 대부
일자리 창출 지원	1조	18.5만 명	- 실업자 창업자금 등 지원 - 장기실직자를 산림간벌, 환경정비 등에 활용

○ 문제점과 정책 방향

- 실업기간중의 생계보호 수준이 아직 미흡함
-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고 지급 기간도 길지 않아 이들의 생계 보호에 미흡함
- 더 심각한 것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임
- 이 때문에 정부가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지님
- 하지만 이 경우 재원 확보의 벽에 부딪치게 됨. 또 '복지병' 유발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음
- 따라서 실업자가 단시간내에 재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
- 미흡한 직업안정망과 직업훈련 시스템으로 갑작스런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할 수

있을 지 의문시됨

- 실업자의 취업자로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은 단시일내에 가능하지 않음
- 또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시장 인프라만으로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음
- 결국 가장 핵심 정책 방향은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
- 일자리 창출의 방법론과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 - 고금리와 자금난 때문에 민간의 투자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
 -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능책이 아님
 - 세금인상이나 국공채 발행보다는 공공부문의 대폭 정비 등 정부지출 축소나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
 - 또 해외자본을 유입하는 것이 중요함. 특히 대규모 SOC관련 투자에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므로써 고용창출 효과도 도모하고 향후의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
-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지원하는 다각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여타의 실업 대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을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함.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은 총실업 대책 추진 비용의 10%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
 - 지원 내역을 보다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
(채 창 균 ckchae@hri.co.kr ☎724-4031)